

◎한국 IPG의 활동

· 제32회 한국IPG세미나 '한국의 모방품 대책' 주제로 개최 01

◎IP를 알자

한국IP뉴스 05

「신·지식재산의 최전선은 지금」 06

- 일본의 한국 특허 출원 건수, 2위로 하락

- 윤석열 정권의 지식재산정책

- 한국 특허청 최초 여성 청장 취임



NEW 한국IPG 회원 등록

한국 IPG 회원등록은 아래 URL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g/>

한국 IPG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회비는 없습니다.



사무국으로부터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제트로 한국 지재 웹사이트(<https://www.jetro.go.jp/korea-ip>)에 최신 한국 지식재산 뉴스와 법 개정 정보, 판례 해설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UTION

〈한국 IPG INFORMATION〉에 게재된 기고·번역문 등은 모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된 것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QUIZ 퀴즈를 맞춰봅시다!

2022년 7월, 한국 특허청은 국내 중요 산업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 심사해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산업은 무엇일까요?

① 2차전지 ② 메타버스 ③ 반도체

※ 정답은 본지 5페이지 하단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국 IPG의 활동

제32회 한국IPG세미나 '한국의 모방품 대책' 주제로 개최



한국에서의 모방품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모방품이 한 번 시장에 나오면 제품 매출이 감소하고 지금까지 쌓아 올린 평판이 훼손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방품 대책이 중요합니다.

이에 2022년 7월 27일, 제32회 한국 IPG 세미나(일본 특허청 위탁 사업)를 개최하여, 모방품 대책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원 변호사와 이준서 변리사가 '한국의 모방품 대책'을 주제로 강연을 했고, 주식회사 산리오 코리아의 배원준 이사가 '일본계 기업의 모방품 대책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의 츠치야 부소장이 최신 한국 지식재산 뉴스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동시 진행으로 개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한국의 모방품 대책(발표 내용 일부 발췌)

1. 모방품 대응 개관

모방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에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을 비롯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민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은 산업재산권법으로, 각각 기술, 상표, 디자인을 보호합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를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출처의 오인·혼동이나 트레이드 드레스, 희석화, 상품형태모방(dead copy), 아이디어 침해 등에 대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방행위로부터 보호해주는 법률은 다양하기

-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원 변호사



이준서 변리사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보호해야 할 상품의 수명이 짧은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품형태모방 주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근본적인 보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권리를 획득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해당 상품 시장으로의 진입이 용이해 경쟁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미 획득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II. 부정경쟁방지법: 일반 조항을 중심으로

1. 단팥빵 가게 사건



원고 가게

피고 가게

(출처: 세미나 발표 자료)

이 사건의 원고 가게와 피고 가게의 상호는 다르지만 간판과 내부 인테리어 등 가게의 이미지는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법원은 ①'원고가 가게의 디자인을 위해 수차례 일본을 방문해 여러 디자인 업체에 디자인을 의뢰한 점'을 고려해, 원고의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당한 투자 또는 수고에 의해 만들어졌으므로 일반 조항의 '성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②피고 가게의 표장 등은 원고 가게의 영업 표지와 매우 유사하며, 피고가 원고 회사를 퇴사한 후 별도의 가게를 열어 인테리어 업체에 원고 가게의 구조를 참고하도록 요구한 점 등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 또는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③원고 가게는 다른 가게와 구별되는 독특한 분위기를 가져 유명했는데 피고 가게를 원고 가게로 오인하는 소비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적 이익의 침해를 인정하여 원고의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2. 핸드백 사건



원고 제품 (버킨백)

피고 제품 (눈알 가방)

(출처: 세미나 발표 자료)

원고 측 핸드백 제품인 버킨백은 수십 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독특한 형태가 유명합니다. 한편 피고 측 핸드백은 원고 측 버

킨백과 비슷한 디자인에 커다란 눈알이 더해졌으며 버킨백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버킨백의 형태는 국내에서 계속 독점배타적으로 사용되었음에 따라 특정 상품 출처로서의 식별력을 갖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패션 잡화 분야에서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 표지를 피고가 사용하려면 원고와의 계약 등을 통해서 제휴 혹은 협업을 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더해 피고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과 판매가 원고 제품에 대한 일부 수요를 대체하고 원고 제품의 희소성 및 가치 저하로 인해 잠재적 수요자가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III. 모방품 대책: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중심으로

모방품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테이크 다운이나 경고장, 특허청 단속, 세관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중 특허청 단속의 주체인 특별사법경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특별사법경찰 개요 및 수사 대상

특별사법경찰은 상표·특허·영업비밀·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침해에 관한 범죄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특허청'의 조직입니다.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우선 ①특허청에 등록된 권리의 침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특허법 제225조),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디자인 보호법 제220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상표법 제230조)가 있습니다. 다음은 ②부정경쟁행위입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표지 등과 동일·유사한 사용행위,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양도 등의 사용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다목, 자목에 해당하는 행위),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③영업비밀의 침해입니다. 예를 들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2.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절차 (특허·디자인·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출처: 세미나 발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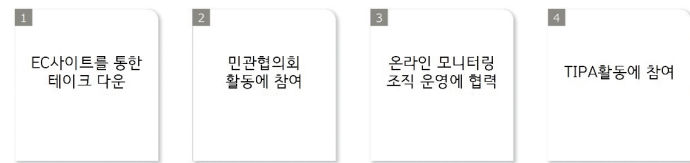
다음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①고소 및 고발 등으로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②침해 유형별로 전문 수사관을 지정하여 수사를 개시합니다. ③수사 개시 후 고소인, 피고소인 순으로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기반으로 침해사실을 특정·검토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증거는 고소인, 피고소인으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제출이 쉽지 않을 경우 모방품이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증거를 임의로 제출받을 수도 있습니다.

IV. 코로나19로 인한 상거래 환경의 변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상거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모방품 대책에 대한 사고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최근 공장이나 창고 등을 대규모로 단속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는 기존의 모방품 대책으로, 비유를 들자면 암에 대한 대책입니다. 반면 현재 활발한 EC사이트에서의 침해는 한 건 한 건이 작아 감기와 같이 치명적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즉 침해가 발생한 한 곳에만 강력한 약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는 비효율적입니다. EC사이트에서의 많은 개별 침해자들을 상대로는 감기약과 같이 적절한 약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전략입니다.

V. EC사이트에서의 모방품 판매에 대한 대책

모방품 판매의 무대가 EC사이트로 바뀐 지금, 어떤 대책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기업이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설정하고 목표에 맞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지면 그다음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감기약을 먹는 등 그에 대한 대책을 정해야 합니다. 사전 대책이나 예방 조치 등의 영양제를 활용해 체력을 길러 둘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네 가지 수단은 침해를 발견하기 전에 미리 취해 두는 대책입니다.



(출처: 세미나 발표 자료)

1. EC사이트를 통한 테이크 다운

우선, EC사이트를 운영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는 'One-Strike-Out'이라고 불리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판매자의 현물상품을 감정한 결과 모방품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판매자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삭제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기업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 기업과의 사전 협력관계 구축을 검토해야 합니다.

2. 민관협의회 활동에 참여

한국에서는 모방품 대책을 세우기 위해 특허청 등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간 협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제공하는 위조품 유통방지 협의회에는 정부기관과 더불어 EC사이트 운영 기업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기업 측에서는 한 번 참여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온라인 모니터링 조직 운영에 협력

EC사이트가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모니터링 조직에 기업이 감정 포인트를 제공하여 EC사이트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합니다. EC사이트가 모니터링을 책임지도록 하는 법 개정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각 EC사이트는 모방품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활동을 자율적이고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사전에 EC사이트와의 대책을 강구하고 자사의 감정 포인트를 제공하여 온라인 모니터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TIPA(무역관련지식재산보호협회) 활동에 참여

TIPA는 관세청 산하 모방품 대책 단체로, 한국 세관을 대상으로 위조품 감별교육을 개최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수출입 물품 조사 및 단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TIPA 홈페이지에서는 공식사항 및 시중 감시 위조품 적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사 간 정보 공유도 가능합니다. 

● SANRIO의 한국 내 모방품 대책(발표 내용 일부 발췌)

- SANRIO KOREA 배원준 이사

1. 인터넷 모방품 삭제사례 소개

SANRIO KOREA에서는 인터넷상 침해에 대해 수사기관의 단속 및 경고장을 통한 자발적 삭제 요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상 모방품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법률사무소와 공유해 모방품 게시물을 삭제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삭제 실적은 2020년에는 688건, 2021년도에는 2,929건에 달했으며, 올해는 약 1,200건의 게시물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대규모 침해나 고액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게시물 삭제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의 모방품 판매자의 계정을 삭제하도록 유도하고, 모방품 판매자의 반발을 사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면서 모방품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모방품 삭제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침해자는 SANRIO의 캐릭터를 사용한 사무용 의자를 G마켓이라는 EC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침해 사실을 발견한 당사는 G마켓에 테이크 다운 신청





(출처: 세미나 발표 자료)

서를 제출했고, 침해 사실을 확인한 G마켓은 즉시 삭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침해자로부터 향후 침해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선처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받아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 최신 한국 지식재산 뉴스 (주요 부분만 발췌)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츠치야 신고 부소장

1. 한국 코로나19 현황

1. 오미크론 변이 확산

2021년 말부터 한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5차 대유행)되어 이미 한국 국민의 약 40%가 확진되었고, 0~9세 소아도 과반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2년 7월 말 현재, 6차 대유행이 도래하여 다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한일 왕래

2022년 6월 29일, 김포~하네다 노선이 2년 3개월 만에 주 8회 왕복으로 재개하였고 7월 25일, 주 28회 왕복으로 증편되었습니다(코로나19 이전에는 주 84회 왕복). 하지만 2022년 7월 말 현재, 비자 취득이 쉽지 않은 점, 한일 양국 모두 출국 전 코로나 검사가 필요한 점 등으로 인해 여전히 왕래의 벽은 높지만 합니다.

II. 한국 지식재산법 개정 현황

1. 심판청구기간 및 재심사청구기간의 연장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2022년 4월 20일 시행)

기존 30일 이내였던 심판청구기간 및 재심사청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 개정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측에서 건의사항으로 요청해왔던 사항으로, 2020년도 건의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재외자의 지정기간연장과 관련해서는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분리출원제도의 도입 (특허법) (2022년 4월 20일 시행)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거절결정 유지)을 받은 후에도 출원에서 거절되지 않은 청구항만을 분리해서 출원할 수 있는 '분리출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3. '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 등에 대한 민사적 조치 마련 (부정경쟁방지법) (2022년 4월 20일 시행)

일본에서 말하는 '한정 제공 데이터'와 관련하여, 데이터의 부정사용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부정취득·사용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보는 것과 '기술적 제한 수단'의 효과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에 관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4. 퍼블리시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2022년 6월 8일 시행)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5. 침해행위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2022년 6월 10일 시행)

권리침해행위가 '친고죄'에서 피해자가 기소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경우에만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허법에서는 2020년 10월 20일에 이미 동일한 취지의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6.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상표 사용의 명문화 (상표법) (2022년 8월 4일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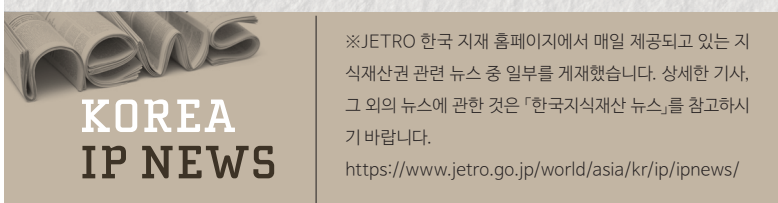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전시·수출·수입하는 행위가 상표의 사용 행위에 추가되었습니다.

7. 부분거절제도 도입 (상표법) (2023년 2월 4일 시행 예정)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일부 지정 상품에만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 상품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 재심사제도 도입 (상표법) (2023년 2월 4일 시행 예정)

심사관의 상표 등록 거절 결정에 대해 지정 상품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으로 간단히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JETRO 한국 지재 홈페이지에서 매일 제공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련 뉴스 중 일부를 게재했습니다. 상세한 기사, 그 외의 뉴스에 관한 것은 「한국지식재산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news/>

① 특허청,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한 “특허상담 챗봇”서비스 제공

| 한국특허청 (2022.5.16)

특허청은 ‘특허상담 챗봇’을 통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서비스를 17일(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상담사를 통한 상담서비스는 업무시간에만 가능하여 서비스 이용에 시간적 제약이 있었으나, 챗봇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게 된다.

챗봇은 수만개의 질문과 응답 데이터베이스로 학습되어,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서 제시한다. 특허상담 챗봇의 화면 구성은 사회관계망(SNS) 채팅창과 동일하며, 서로 대화하듯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허상담 챗봇은 PC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특허고객상담센터홈페이지(www.kipo.go.kr/kcall/) 또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비서 챗봇(www.chatbot.ips.go.kr/)에서 별도의 회원가입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②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관련 특허출원 6년간 3배 증가

| 한국특허청 (2022.6.13)

현대차, 벤츠, 혼다 등 일부 완성차 제조사를 중심으로 조건부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3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어, 주행 상황에 맞춰 운전자를 지원하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의 감지장치를 통해 주행 상황을 인식해서 운전자에게 위험 상황 등을 자동으로 알려 주고, 속도 조절 등의 일부 운전기능을 자동화한 기술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 출원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관련 특허는 '13년 2,000여 건에서 연평균 약 20%씩 증가하여 '19년에는 6,0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30.7%), 미국(27.6%), 일본(20.8%), 한국(10.6%), 유럽(10.3%) 순으로 특허가 출원되었다.

기업 출원을 살펴보면, 토요타, 현대, 혼다, 닛산 순으로 일본과 한국 완성차 업체의 출원이 많았고, 보쉬, 덴소, 만도, 히타치 등 자동차 부품 업체가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특허청, 특허심판 증거조사 실사레집 최초 발간 | 한국특허청 (2022.7.21)

특허청은 특허심판 증거조사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허심판 증거조사 실사레집’을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에서 당사자(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들은 문서조사, 증인신문, 감정, 검증, 사실조회 등 다양한 종류의 증거조사를 활용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입증할 수 있다. 그런데 문서 조사 위주의 증거조사에만 익숙한 당사자들이 대다수여서 증인신문, 현장검증 등 다른 종류의 증거조사는 생소하게 느끼고 대응을 어렵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의 증인·당사자 신문, 사실조회, 현장에서의 검증을 활용한 특허심판 사건들 중 주요 사례를 모아서 이번 실사레집을 제작했다. 실제 심판사건에서 증거조사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심판의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증거조사 절차를 밟는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사레집의 전체 내용은 특허심판원 누리집(www.kipo.go.kr/ipt/)에서 확인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다.

④ 특허청,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등 전방위 특허 지원 | 한국특허청 (2022.7.25)

특허청은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의 범국가적 지원에 발맞춰 반도체 산업의 핵심 특허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우리 기업의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3나노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인 만큼, 신속한 특허 획득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허출원서의 발명자 정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중추라 할 수 있는 핵심 인력들의 관리도 지원한다. 반도체 특허의 발명자 정보로 분야별 핵심 인력과 발명자 평균연령의 변화 등을 분석하고, 향후 인력양성의 우선적으로 필요한분야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등 핵심기술 분야 퇴직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활용하여 해외 이직으로 인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가늠하고, 우리가 선점해야 할 연구개발(R&D) 분야를 제시하는 등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정답은 ③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한일 양국에서 모두 산업의 '먹거리'라 일컬어지며, 국제경쟁력 확보와 안보를 위한 중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2년 7월 25일자 지식재산 뉴스 게재)

File No.163

일본의 한국 특허 출원 건수, 2위로 하락



이전에 본 란에서,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외국의 한국 출원에 대하여 국가별 내역 건수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최근의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중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움직임을 소개하겠습니다.

1. 속지주의와 외국 출원 전략

특허제도의 본질은 권리자 보호와 기술정보 활용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출원 후 일정 기간 (출원 후 1년 반)이 지나면 내용이 공개되어 그 기술은 누구나 널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는 국가별로 출원되어 각국 국내에서 심사 및 등록되고 특허권의 효력은 등록된 국가의 국내에 한정됩니다. 이 원칙을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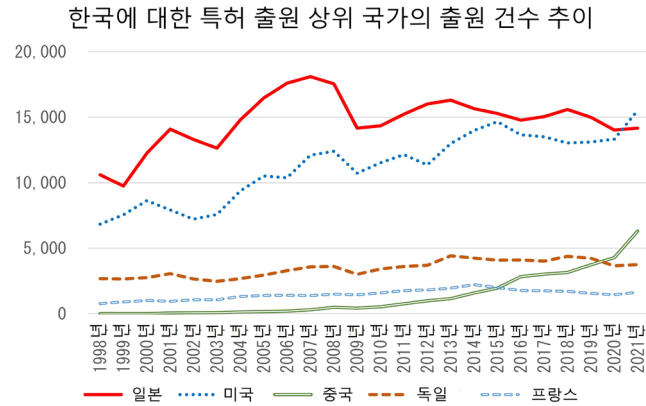
예를 들어 일본의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 및 등록된 경우, 그 특허권의 효력은 일본 국내에서만 유효하며 다른 국가에서는 무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만 출원하고 타국에 출원하지 않은 특허 내용은 1년 반 후에 공개되어 전 세계에서 (일본어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반면에 그 특허권의 효력은 일본 국내에 한정되기 때문에, 외국에 기술 정보를 제공하기만 할 뿐 외국에서 어떠한 권리도 얻지 못합니다.

약 20년 전에 일본의 특허 출원 건수는 현재보다 50% 정도 많았지만 일본 국내에만 출원하는 비율이 높아, 일본에서 해외로의 기술유출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 출원한 특허와 똑같은 내용으로 외국에도 전부 출원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 번역 비용과 현지 대리인 비용 등 거액의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당시의 문제를 반성하여 많은 일본 기업이 특허의 질을 높여 일본 국내 출원 건수를 압축하는 동시에 외국 출원 비율을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에 출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있는 국가와 거대한 시장이 있는 국가, 특히 미국, 유럽, 중국, 한국 등의 주요 국가에 우선도에 따라 출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외국 출원 전략입니다.

2. 외국의 한국 특허 출원 건수 추이

상기 이유로, 외국의 한국 특허 출원 건수는 해당 국가와 한국의 기술적 밀접성의 척도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십시오.



출처: 한국 지식재산 통계연보 (2001~2020년),
한국 지식재산 통계 FOCUS (2021년) 기반 필자 작성

한국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있는 1998년 이후 외국의 한국 특허 출원 건수를 정리해보면, 2020년까지는 일본이 줄곧 선두를 유지해왔지만 2021년 처음으로 미국에 자리를 내주고 2위로 하락했습니다. 과거 2008년 리먼 사태 등 경기 변동의 물결에 휩쓸려 출원 건수가 전체적으로 오르내리다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출원을 서서히 늘려 일본을 앞지른 셈입니다. 한국에 대한 특허 출원 건수는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 상대적 비교로 논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큰 흐름으로 말하자면 일본은 이른바 잃어버린 30년 간 다른 여러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일본의 한국 특허 출원에도 그 영향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디자인 출원, 상표 출원 건수는 각각 3위로, 유일하게 1위였던 특허 출원 건수가 2위가 된 점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IPG}

2022년, 일본이 다시 한국 특허 출원 1위를 탈환할 것인지, 또한 맹렬한 기세로 바짝 뒤쫓는 중국은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츠치야 신고 부소장(특허청 파견)

2001년 일본특허청 입청. 통신·반도체분야 심사관·심판관, 정보기술통괄실 실장보좌, 심판과 과장보좌, 주임 상석심사관 등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현직

File No.165

윤석열 정권의 지식재산정책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며 새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한국 지식재산정책의 방향을 가능해 보고자 합니다.

1. 대통령 선거 쟁점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앞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1)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 (2)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 (3)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 (4)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 (5)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 (6)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 (7)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8)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9)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 (10)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 (출처: 대통령 공약집 중 ‘윤석열의 10대 비전’)

한국은 코로나19가 사회 경제에 미친 영향, 높은 청년 실업률,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악화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이 많아 대통령 공약에도 생활에 밀접한 내용들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영향인지 지식재산정책은 대통령 선거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고, 국민의 힘이 발명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174페이지)에도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2.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출범시켜 정책 시책의 점검 결과를 2022년 5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발표했습니다. 전체 186페이지에 육박하는 문서의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지식재산에 대한 언급은 제목과 본문을 합쳐 3줄에 불과했습니다.

과제22 :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산업

통상자원부)

‘비밀특허제도 도입, 기술탈취 방지 등 해외지식재산 분쟁 지원 강화와 AI·빅데이터 기술 활용 특허행정 혁신 추진’

한국에는 이미 비밀특허제도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특허법 제41조) 상기 ‘비밀특허제도 도입’의 의도는 불명확하지만, 이외 내용은 현 시책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마무리

공개된 정보만 살펴보면 새 정권의 지식재산정책은 큰 변동 없이 현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침 지식재산정책에서 중요한 2개의 5개년 계획인 ‘제3차 지식재산기본계획(2022~2026)’과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기본계획(2022~2026)’이 2021년 12월 말에 수립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지식재산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새 정권이 출범함에 따라 2024년까지 약 2년 동안은 정권 집권당과 국회 다수당이 ‘불일치’하는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져, 지식재산 관련 법안을 비롯한 법안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IPG}

앞서 소개한 2개의 5개년 계획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본어 번역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츠치야 신고 부소장(특허청 파견)

2001년 일본특허청 입청. 통신·반도체분야 심사관·심판관, 정보기술통괄실 실장보좌, 심판과 과장보좌, 주임 상석심사관 등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현직

한국 특허청 최초 여성 청장 취임



2022년 5월 31일, 제28대 한국 특허청 청장이 취임했습니다. 첫 여성 민간 출신 청장입니다. 신임 청장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향후 지식재산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겠습니다.

1. 윤석열 정권은 서오남 인사?

한국 행정부는 18부 5처 18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장'에 해당하는 장관이나 청장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교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력주의를 표방하며 주요 인선을 발표했는데, 모두 '서'울대 출신의 '오'십 대 '남'성(서오남)뿐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남은 장차관 임명 시에 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후보가 없으면 남성을 기용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2022년 5월 26일,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차관급)에 모두 여성이 지명되었고, 며칠 뒤인 5월 29일에는 한국 특허청 신임 청장으로 이인실 청장이 내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특허청 제28대 청장의 취임일은 내정 발표 이틀 후인 2022년 5월 31일. 제27대까지 특허청장은 모두 관료 출신 남성이었습니다. 여성이 취임한 것도 민간 출신자가 취임한 것도 이번이 모두 처음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인사라 할 수 있습니다.

2. 신임 청장 약력

이인실 청장은 부산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교 국제지식재산권연구센터(CEIPI),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법학과, 미국 워싱턴대학교 로스쿨을 거쳐 고려대학교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85년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는데, 당시 부산대학교 출신 첫 변리사이자 한국에서는 세 번째 여성 변리사였습니다. 이후 지식재산전문가로서 오랜 기간 활약했습니다.

또 한국여성변리사회 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전문직여성(BPW) 한국연맹회장,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사)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등 공직을 포함해 다양한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이번 신임 청장 취임은 변리사로서의 오랜 경력과 공직을 포함한 다양한 경험이 높게 평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지식재산정책에 미칠 영향

앞선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언급이 적고, 지식재산정책에서 중요한 2개의 5개년 계획인 '제3차 지식재산기본계획(2022-2026)'과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2022-2026)'이 2021년 12월 말에 수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새 정권은 현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상기 기본계획 중 이미 언급된 과제만 해도,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응,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지원, 지식재산 전문 인재 육성, 지식재산 분야 국제협력 등 수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취임한 신임 청장이 앞으로 어떤 수완을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아무쪼록 지식재산정책 과제에 과감하게 대응하여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앞서 소개한 2개의 5개년 계획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본어 번역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 해설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초치야 신고 부소장(특허청 파견)

2001년 일본특허청 입청. 통신·반도체분야 심사관·심판관, 정보기술통괄실 실장보좌, 심판과 과장보좌, 주임 상석심사관 등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현직